

EEC에 의한 經濟統合과 유럽경제의 고민

金 世 源*

目 次
I. EEC에 의한 單一市場의 形成
II. EEC의 政治經濟學的 側面
III. 經濟的 成果와 課題

20世紀 初까지 世界經濟의 主軸을 形成하여 오던 西「유럽」經濟는 兩次大戰을 겪으면서 美國經濟에게 그 地位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 1960년에까지 西「유럽」은 美國과 함께 兩大支柱를 유지하여 왔다고도 할 수 있으나 70년대 중반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이제 日本經濟에 비하여도 劣勢를 면치 못하고 있다.

西「유럽」經濟가 과거의 活力을 되찾기 위한 最大의 課題는 超國家的(supra-national), 또는 聯邦主義的(federalist) 接近에 바탕을 둔 經濟統合의 深化와 현재 추진중에 있는 經濟的 再調整이라고 생각된다. 또 이 두가지는 相互 밀접한 關聯을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西「유럽」은 同質的이면서도 보기에 따라서는 크게 特性을 달리하는 多樣한 經濟로 구성되어 있다. 紙面의 制約도 있기는 하나 本稿에서는 各國 經濟에 대한 評價를 피하고 주로 EEC에 의한 經濟統合과 총체적인 經濟的 成果 및 課題를 中心으로 整理하고자 한다.

I. EEC에 의한 單一市場의 形成

1958년 EEC가 機能을 갖기 始作할 당시 會員國은 프랑스, 西獨, 이태리 및 베네룩스 3國의 6個國이었다. 그 후 73년 英國, 덴마크 및 「에이레」의 3個國, 81년 그리스, 그리고 86년 스페인 및 포르투갈이 加入하므로써 현재 12個國으로 확대되었다.

* 서울大學校 國際經濟學科. 이 論文은 韓國經濟學會의 「第2次 國際韓國人經濟學者 學術大會」(1986. 8. 18~19)全體會議에서 發表되었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즉 傳統的(「스위스」), 政治的(「스웨덴」), 또는 國家條約에 의한(「오스트리아」) 中立을 이유로 同參하지 않고 있는 小國들을 除外한다면 EEC는 西「유럽」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아직까지 別個의 獨立國家들로 構成되어 있기는 하나 EEC를 하나의 大市場으로 볼 수도 있는 理由로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歷史, 傳統, 慣習, 文化, 外交, 社會 등 제여건으로 因하여 自然發生的인 統合의 傾向을 보여왔고 이에 따라 市場의 同質化가 추진되어 왔다.

또다른 하나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이미 兩次大戰을 계기로 聯邦主義者(federalist)들에 의하여 꾸준히 經濟統合이 시도되어 왔으며, 1952년 ECSC(유럽 石炭鋼鐵 共同體) 그리고 58년 EEC 및 ENEC(유럽 核에너지 共同體)의 수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政府間 經濟全分野에 걸친 統合의 노력이 심화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C 市場의 特性은 무엇보다도 個別 國民經濟單位로 구성되었으면서도 統合의인 要素를 강하게 띠고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理由때문에 「西유럽」 經濟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二元的인 接近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EC를 한 單位로 할 때, 비교하는 經濟指標에 따라서는 世界에서 가장 큰 市場規模를 形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例로 人口를 對比한다면 12個國을 포함하는 EC의 경우 3억2천만명으로 美國의 1.4배 그리고 日本의 2.7배에 해당한다. 總GDP 規模에 있어서 역시 3조2,310억 달러로서 美·日의 경우를 上廻하나 1人當 所得은 一部 中進會員國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平均値를 기준으로 한다면 85年 現在 1만달러를 약간 초과하며 美國보다는 낮으며 日本과는 비교되는 水準이다.

EC市場의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다른 先進工業國에 比하여 相對적으로 높은 貿易依存度에 있으며, 이에 따라 世界總貿易에서 차지하는 構成比는 70년대 初 거의 40%로부터 다소 下落하기는 하였으나 85년 33%에 이르고 있다. 최근 EC會員國의 對外貿易依存度는 平均 50%를 크게 상회하는데 이는 美國 및 日本의 경우에 비할 때 2~3배에 해당된다. 특히 베네룩스 3個國에 있어서 同 依存度는 100%内外에 이르고 있다.

EC諸國이 이와같이 높은 貿易依存度를 갖는 理由는 근본적으로 賦存資源의 制約 및 傳統的 要因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美國에 比하여 資源의 賦存面에서 不利한 西「유럽」諸國은 과거 殖民地, 그리고 60년대 中반 以後는 後進國들로부터의 半·原資材 輸入에 크게 의존하여 오고 있다. 다음, 會員國別로 市場이 협소하다는 데에도 크게 그 原因이 있기는 하지만 日本의 경우와는 극히 對照的으로 特化나 專門化 對

象産業의 범위가 좁다. 戰後 貿易發展의 패턴을 살펴더라도 産業間(inter-industry)보다는 産業內(intra-industry) 特化에 치중함으로써 工業品에 있어서 전형적인 水平分業을 指向해 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經濟的인 原因보다는 文化, 傳統, 歷史 및 國民性 등을 포함하는 諸要素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으며 어떤 意味에서는 自給的인 保護主義를 追求할 수 없는 限界를 말하여 주는 側面이기도 하다. 특히 日本과 같이 多樣하고도 폭넓은 産業部門에 걸쳐 國內市場을 보호해 주고 또 競爭力을 갖추려는 自己完結的인 市場과는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EEC와 같은 經濟同盟의 추진도 따지고 보면 以上과 같은 市場의 特性을 고려하여 經濟的 次元에 局限한다면 對內的으로는 大市場의 形成을 通하여 正·동태적 經濟利益을 실현하는 한편, 市場統合에 의하여 會員國間 域內 貿易依存度を 높이는 데 그 취지가 두어지고 있다.

II. EEC의 政治經濟學的 側面

1. 經濟統合理論의 展開

歷史적으로 볼 때 許多한 事例가 거론되기는 하나 現代的 意味에서 經濟統合의 선구적 경험은 19世紀 중엽 設立된 獨逸關稅同盟(Zollverein)이라 할 수 있다. 關稅同盟의 要件을 充分히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會員國間 政治協力 내지는 結合까지를 前提로 해야만 그 機能의 원활한 遂行을 기대할 수 있다는 實證을 남겼다.

Zollverein이 F.List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保護主義의 性格을 띠었는데 反하여 1944年 탄생한 Benelux는 보다 市場擴大의 追求에 重點이 두어졌다. ECSC의 設立(1952)은 共同市場의 개념을 낳게 한데 더하여 Zollverein과 더불어 經濟統合의 政治·軍事的 意義를 강조하는 契機가 되었다. 또 아직까지 唯一한 經濟同盟의 成功적 事例로 남아있는 EEC의 形成은 經濟統合理論에 영향을 받았음은 물론 이 理論의 發展에 中추적인 기여를 하여오고 있다.

經濟統合理論은 特定 國民經濟間 統合의 形態(自由貿易地域, 關稅同盟, 共同市場 및 經濟同盟 등), 메카니즘 및 效果 등을 그 對象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國際經濟理論 分野에서도 특수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參與 會員國間 特定 經濟目的을 추구한다는 點에서 폭넓게 經濟理論을 수용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域內 經濟去來의 장애를 제거하므로 自由貿易主義의 要素를 갖고 있는 반면, 域外 非會員國에게는 해

택이 會員國間에만 排他的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保護主義의 側面도 다분히 갖고 있다.

F. Machlup(1977)도 적절히 指摘하고 있거니와 統合理論의 기원을 찾는다면 이미 18世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하나의 理論의 體系로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J. Viner(1950) 및 M. Byé (1950)의 論文이 發表되면서 부터이다. 그 以前까지 自由貿易論者들은 大部分 國際貿易이 실제로 完全히 自由化될 수 없을 때 一定會員國 들간 經濟統合의 추진을 비롯 制限된 범위에서나마 去來의 增大에 따르는 利益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Viner에 의하여 提起된 貿易創出(trade creation)과 貿易轉換(trade diversion)의 개념은 統合理論의 展開에 있어서 기본적인 分析手段으로 登場하기 始作하였다.

Viner-Meade-Gehrels-Lipsey로 이어지는 初期 統合理論家들의 重要 관심사는 傳統의인 資源의 配分的 效率性에 있었다.

Lipsey의 一般均衡分析(1970)에서도 알 수 있듯이 國家間 代替(inter-country substitution)는 물론 財貨의 相對價格 變化에 따르는 商品間 代替(inter-commodity substitution)까지를 고려했을 때 貿易轉換이 會員國의 福祉增大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보다 現實的인 假設에 그 力點이 두어졌다.

고전파적 經濟統合論者들이 비교우위에 따르는 特化의 促進에 의한 生産增加와 같은 靜態적 分析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와 병행하여 B. Balassa(1962)를 비롯한 一部는 經驗分析에 입각하여 規模의 經濟, 競爭의 提高를 통한 市場構造의 變化, 그리고 技術變化 및 資本移動의 增進이 生産要素에 미치는 質的·量的 波及 등 動態的 側面도 다루었다. 또 R. A. Mundell(1964)의 論文은 經濟統合의 추진에 따른 會員國들과 非會員國間 交易條件 效果를 分析하는 最初의 시도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傳統的 統合理論은 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두 가지 側面에서 크게 道進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또 보다 現實的인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效率性을 강조하였을 경우, 一方의 無差別의 輸入制限의 완화가 經濟統合보다 우월한 理由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Cooper-Nassel이나 H. G. Johnson(1965)의 道進에서도 알 수 있듯이 關稅同盟 以上の 經濟統合을 추진하는데는 하나의 經濟圈을 形成한다는 그 나름대로의 排他的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先進諸國間 統合理論으로 연결된다.

또다른 하나는 EEC를 비롯한 거의 大部分의 經濟統合體가 會員國間 財政·金融·通貨 등 諸經濟政策의 調整을 併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域內 生産要素 및 生産物

의 自由移動을 위한 '소극적 統合'(negative integration)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 市場統合'(positive integration)을 위한 政策的 協力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經濟統合의 추진에 있어서 단순히 會員國間 生産요소 및 生産물의 移動에 대한 '無差別待遇'도 前提되어야 하나 이와 同時에 大市場을 形成하는 과정에서 각종의 歪曲(distortions)을 除去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經濟統合의 模型을 분류하여 접근하려는 시도나 特別 정책적 分析을 내용으로 하는 效果測定은 큰 意味를 갖지 못한다. 그 보다는 각 구체적 經濟統合 '모델'을 대상으로 한 事例研究(Ail N. Agraa, 1982) 또는 分析의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統合의인 接近(P. Robson, 1985) 등이 더 現實적인 設得力을 갖고 있다.

2. 市場統合의 推進

EEC에 의한 會員國間 市場統合의 模型은 특히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多様な 問題가 야기되는데 이제껏 實現內容을 단순화하여 綜合,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EEC의 根幹을 이루는 것은 關稅同盟으로서 이미 1968年 7월부터 域內 會員國間에는 關稅를 비롯한 諸般 輸入障壁이 철폐되었으며 對外的으로는 하나의 單一 關稅政策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域外 共同關稅를 기초로 이미 1961年 GATT의 테두리 내에서 開催된 '덜른·라운드'를 계기로 EEC가 會員國을 代表하여 協商을 展開하여 오고 있으며 個別的으로 第3國과도 協定을 체결하였다.

또 過渡期間이 만료되는 1970년부터는 종체적으로 共同市場을 실현하였다. 즉 域內에서는 단순히 商品의 移動 뿐만 아니라 노동 및 資本과 같은 生産要素까지 자유롭게 會員國의 國적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지않고 流通되고 있다.

나아가 EEC는 會員國의 經濟·社會政策에 있어서도 部門別로 調整, 協力, 接近 내지는 統一을 추진하고 있는데 經濟同盟이라고 불리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이와같이 궁극적으로 各國이 실시하고 있는 經濟·社會政策을 統一시키려는 근본적인 배경은 商品 및 生産要素의 自由移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各國間 相異한 政策內容에 따라 市場이 歪曲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EC의 創立者들이 가장 力點을 두고 있는 分野는 農業政策, 對外貿易政策 및 輸送政策으로서 周知하는 바와 같이 각각 單一의 共同政策이 수립, 實施되어 오고 있다.

이 部門에 있어서는 會員國들의 經濟主權이 이미 소멸되어 각료 理事會(Council of Ministers) 및 執行委員會(Commission)로 代表되는 共同體가 거의 排他的인 權限을 갖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域外 共同貿易政策의 一部 內容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會員國이 共同體와의 協議에 따라 政策的으로 介入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施行의 水準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다음, 租稅政策, 景氣政策, 物價政策, 地域政策, 技術政策, 社會保障, 賃金政策, 金融政策 및 에너지政策 등 제반 社會·經濟政策에 있어서는 以上の 3大政策의 경우와 같이 明白히 單一의 共同政策 수립이 규정되고 있지는 않다. 여러가지 多樣的 用語를 구사하여 調整을 기하고 있는데 이제껏 업적을 살펴보면 分野別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會員國이 자유로이 獨立的으로 政策을 실시할 수는 없으며 共同體와의 協議와 會員國間의 協力을 前提로 한 테두리가 정해져 있다. 史上 最初의 經濟同盟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展開를 확실히 豫測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신축적인 立場을 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EEC가 과도기 以後에 이룩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서 1979년 設立된 EMS (유럽통화기구)를 들 수 있다.

70년대 初「브레튼·웃즈」體制가 붕괴되고 共同「스테이크」制가 채택되었는데 EEC에 經濟統合의 취지에 맞추어 발전한 것이 EMS라고 할 수 있다. 同 機構의 취지는 다른 先進諸國과 마찬가지로 EEC會員國들도 변동환율제를 採擇하기는 하나 相互 通貨價值間 변동폭을 축소(上下限 各各 2.25%)하자는 데 있다. 所謂 共同變動換率制이며 지난 4月 初 서독「마르크」및 프랑스「프랑」의 價值調整도 同 機構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會員國間 通貨價值의 變動을 制限하지 않고 각국의 자의에 맡긴다면 EEC에 의한 經濟統合은 와해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長期的으로는 會員國 通貨價值를 상호 固定시킴으로써 單一의 通貨圈을 형성하자는 이른바 通貨同盟의 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EC域內 一種의 共同通貨라 할 수 있는 ECU(유럽통화단위)가 창출되었고 또 國際收支不均衡의 시정을 지원해 주기 위한 共同基金도 설립되었다.

3. 機能의 接近의 限界

Viner, Scitovsky, Byé 및 Allais 등 당시 많은 學者들의 統合理論에 따르는 經濟的利益도 크게 자극제적인 役割을 하기는 하였으나, EEC의 形成은 보다 歷史的인 맥락, 특히 2次大戰 以後 세력균형이나 유럽內 政治·經濟的 與件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당시 유럽內에는 各國間 화해, 團結 나아가 統合까지 시도할 수 있는 共通의 必要性이 公共輿論에 깊이 뿌리박을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성숙하여 있었다. 1, 2次大戰으로 因한 파괴, 인명손실 및 分裂, 保護主義에 의한 피해, 또는 미·소와 같은 超強大國의 形成에 따르는 위축감 등은 유럽人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또 團結의 불가

피성을 強調하는 活力素로도 作用하였다. 특히 유럽復興計劃을 위한 ‘마샬援助’에 의한 財政援助에 크게 힘입어 西「유럽」經濟는 급속한 量的·質的 擴張을 거듭함으로써 불과 10년만인 50년대 末에 이미 先進工業國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있다.

경제적 活力(dynamism)이 政治·社會的 與件에 의하여 造成될 수 있었다면 그 逆도 되풀이 되므로서 西「유럽」內에는 50년대, 그리고 60년대 前까지도 이러한 상호상승作用이 支配하였다. 經濟復興이라는 單線的인 目標 以外에도 ‘美國合衆國’에 비교될 수 있는 ‘유럽합중국’의 건설이라는 理想은 하나의 「비전」으로 등장하였으며, 또 自由·기독교 民主主義, 社會主義 또는 尤로·共產主義間 理念論爭은 西「유럽」人들의 동경을 불어넣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西「유럽」의 결속을 위한 論爭은 크게 英國을 中心으로 한 ‘機能主義的 接近’(functionalist approach)과 프랑스 및 西獨 등 大陸을 발판으로 한 ‘聯邦主義的 接近’(federalist approach)으로 兩分되었다. 당시 분위기로 미루어 연방주의자들의 우세는 當然한 결과였다고도 보여지며 그 基本的인 表現으로 「슈만計劃」(Schuman Plan)에 기초하여 ECSC가 登場하였다.

當初 ECSC의 設立은 鐵鋼·石炭部門에서 共同市場을 실현한다는 경제적 취지뿐만 아니라 各種 重武器生産, 原料의 生産·소비·유통등 全部門에 걸쳐 市場統合을 추진함으로써 重要 西유럽 國家間 戰爭을 미연에 防止 하자는 政治·軍事的 目標도 同時에 갖고 있었다. ECSC의 成功的인 遂行으로 힘을 얻은 유럽內 聯邦主義者 들은 1950年代 初 EPC(유럽政治共同體)의 形成을 시도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EDC(유럽방위공동체)內 유럽軍에 대한 西獨의 참여조건에 불만을 가진 프랑스의 反對로 因하여 同 案이 좌절되자 그 과도기적 단계로 탄생된 것이 바로 EEC이다.

따라서 로마條約 前文에서도 알 수 있듯이 EEC는 長期的으로 西유럽의 政治統合에 이르는 前段階 作業으로 태어났으며 聯邦主義者들이 新機能主義的(Neo-functionalist) 탈바꿈의 所産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經濟的인 側面에서는 統合에 수반되는 利益의 實現은 물론 域外에 대한 經濟依存度の 축소,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大市場의 形成을 통하여 協商權(negotiating power)을 強化 하자는 취지가 重要하게 作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前述한 바와 같이 美國에 비할 때 小規模 開放經濟, 그리고 좁은 幅의 産業部門에 特化하고 있다는 西「유럽」經濟의 特性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新機能主義的 接近이 經濟統合의 심화를 가져오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70년대 中반 以後 不況, 특히 西「유럽」內 低成長, 高失業 그리고 國際收支의 不均衡을 거치면서 다시금 反省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한 예로 域內 貿易依存度(各國의 총 對外貿易에서 會員國間 貿易이 차지하는 비)는 EEC가 설립될 당시 30%를 다소 상회하는 水準이었는데 70년대에 들어오면서 50%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까지 추세를 살펴보면 同 構造比는 52~53%에 머무른 채 더 이상의 深化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EC諸國의 對外貿易構造로 미루어 會員國間 分業化의 여지가 充分히 있음에도 不拘하고 經濟統合의 不振에 따른 制約을 말하여 주고 있다.

또 나중에도 보는 바와 같이 EC諸國 역시 低成長을 탈피하기 위하여는 技術개발의 促進 및 産業構造再編과 같은 經濟的 再調整이 시급한 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이러한 調整作業이 會員國間 市場統合의 深化를 위한 經濟·社會政策部門에서의 긴밀한 協力, 接近, 나아가 統一努力에 의하여 보다 신속히 뒷받침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70년대 初 以後 EC會員國은 잇따른 頂上會談을 開催하여 經濟統合의 擴大와 深化를 시도하여 오고 있다. 또 1985년 12月 「룩셈부르크」 頂上會談에서는 이를 위한 10個 項目과 관련하여 原則的인 合意가 이루어졌으며 今年 2月末 全 會員國의 署名節次까지 거쳤다. 그 重要 內容으로서 1992년까지 域內 財貨, 서비스, 勞動 및 資本移動에 대한 실질적인 障壁을 除去하는 '적극적 統合'의 실현, EMS의 強化 및 ECU利用의 擴大, 共同技術研究開發政策, 그리고 環境 및 外交政策 部門에서의 協力強化 등을 指摘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機能的 次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問題는 經濟統合의 最終的 形態가 아직껏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궁극적으로 一國經濟와 비슷한 模型이 追求되지 않는 限 더 이상 劃期的인 統合의 進전을 期待하기 困難하며 이는 政治協力の 強化 및 政治統合의 推進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戰後 聯邦主義的 接近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要因들이 소멸한 현 단계에서, 그리고 各會員國間 단순한 相互利害의 對立은 물론 經濟主權에 대한 애착 및 國際力學關係의 不透明한 展望 등 허다한 변수를 고려할 때 그 進行方向이 결코 순탄하다고만은 예측할 수 없다.

Ⅲ. 經濟的 成果와 課題

1. 60년대 以後의 高成長과 副作用

60년대 西「유럽」은 着實한 經濟的 成果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經濟復興과 「유럽」의 再建設이라는 강한 意慾과 함께 戰後 黃金期를 이룩한 기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目標

는 자연히 각국 政府로 하여금 積極的인 擴大政策을 추구함으로써 완전 고용, 經濟擴張 및 社會福祉에 역점을 두게 하였다. 어떤 意味에서는 30년대 登場하였으나 세대로 응용될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케인즈理論'이 현실적으로 실험될 수 있었던 期間이기도 하였다.

60년대로부터 70년대 初까지 EC諸國의 연평균 成長率을 살펴보면 英國의 2% 内外를 除去할 경우 거의 5% 水準에 到達하므로서 前例없는 기록을 남겼으며 이에 따라 大部分 國家에 있어서 失業率도 거의 完全雇傭 狀態라 할 수 있는 4%臺에 머물렀다. 각국간 政治的 社會的 立場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유럽의 地位回復이라는 目標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하였으며 이는 다시금 經濟擴張이라는 거의 例外없는 結果를 가져 왔다.

特記해야 할 긍정적인 要素中の 하나는 EEC에 의한 經濟統合의 추진에 따른 會員國間 경제장벽의 除去가 발생한 효과였다.

그 以前까지 분할되었던 各國間 市場이 商品去來 및 生産要素의 移動을 제약하는 장에요인의 철폐에 依하여 점차 통합되어 하나의 大市場을 점차 形成하게 되었고 그 결과 貿易·資本去來는 급속히 증가하기 始作하였다. 물론 정확히 순수한 統合效果만을 추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域內 貿易增加는 前述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市場의 擴大에 따르는 効果는 정태적 利益을 가져왔음은 물론 動態的으로도 보다 競爭의 市場構造를 유도하고 나아가 저축·투자증대를 통하여 成長을 자극하였다 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大部分 유럽諸國內 擴大政策의 追求가 비록 높은 成長率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그만큼 各國 經濟에 부작용을 累積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西獨을 除外한다면 年平均 5% 内外에 위치하는 높은 物價上昇率을 면치 못함으로써 70년대 중반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의 構造的 要因을 심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擴大政策의 追求는 政府部門의 肥大에 의하여 가능하였는데 1960~78년간 GNP 에 대한 政府支出의 구성비는 EC諸國의 경우 32.1%로부터 46.2%로 증가하여 同期間 OECD諸國의 平均이 28.4%에서 37.9%로 上昇한 事實에 비할 때 두드러진다. 더구나 西獨 및 英國에 있어서 同 構成比가 75년 이후 下落하였다는 點을 감안한다면 기타 EC 國家에 있어서 公共의 市場介入이 그만큼 肥大하여졌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또 美國이나 日本에 있어서 역시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EC諸國의 경우 한층 가속화되었다는 事實을 말하여 주기도 한다.

政府部門의 비대는 市場機能을 저해하여 결국 效率性を 저하시키게 되고 또 競爭力의 弱화를 가져오게 된다. 고용확대나 社會복지의 增大를 추구한데서 비롯된 이러

한 現象은 7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경기침체의 延長을 초래하고 있는 중요한 要因의 하나로 作用하고 있으며 또 産業構造를 비롯한 제반 再調整作業을 지연시키고 있다.

公共部門의 擴張과 인플레이의 進行이 가져온 또다른 副作用 中の 하나는 對外 競爭力의 弱化에 따른 구조적인 國際收支의 弱化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서독의 경우를 除外한다면 大部分 國家는 거의 例外없이 國際收支의 不均衡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要因은 이미 60년대부터 싹터오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經濟的 課題

최근 EC제국이 당면한 經濟的 고민을 한마디로 要約한다면 低成長 그리고 失業의 擴大에 있다. 「케인지언」的 政策이 가져온 병폐에 대한 반발로 採擇된 通貨主義의 接近이 낳은 또 다른 副作用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행히 물가는 安定되었으나 反面 成長率は 80년대 初를 除外하고는 때로는 2~3%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失業率は 80년대 史上 最高水準인 11%以上을 記錄하고 있다. 이는 또 生産性的 相對的인 下落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데 최근 年平均 增加率は 日本의 6~7%에 비하여 國別로 2~4%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産業의 競爭力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4~84년까지 11년간 EC諸國이 産業部門別로 世界市場에서 차지하는 占有率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섬유, 家電製品, 自動車, 事務·通信機器, 機械 및 化學製品등에 있어서 45~50%로부터 35~37%로 下落하였는데 競爭力의 下落을 잘 反映하여 주고 있다.

한편, 경기침체의 延長을 맞아 勞組壓力이나 社會福祉 問題에 있어서 최근 심각한 반성이 일고 있다. 한 例로 이미 西「유럽」內 勞組運動이 退潮를 보이고 있으며 各 조직이나 系派內에서도 行動統一에 不協和音이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生産性的 下落이나 生産擴張을 저해한다는 데 대한 체험에서 비롯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英國病에 더하여 政治나 政黨理念을 우선한 政策이 經濟的 再革新(renovation)에 逆行하는 또다른 例를 프랑스의 경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 프랑스病은 西「유럽」內 政治理念 不在의 현상을 延長시킬 가능성 마저 있다.

「미테랑」政權의 登場과 함께 社會主義的 經濟成長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國有化措置의 단행으로서 1981년을 前後로 총판매액에서 國有化企業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15.7%에서 2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격한 政策의 遂行은 84년 364억 프랑(80년 19억프랑)에 달하는 大規模의 財政赤字를 가져왔음은 물론 非市場

部門의 擴大에 따르는 效率性의 저하에 더하여 당시 추진중에 있었던 調整作業을 지연시키는 結果를 초래하였다.

이에 프랑스政府는 1985年 國營企業의 私有化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고 81年 以前의 狀態로 되돌아감으로서 4년간의 공백기간을 갖게 되었다. 이와같이 쓰라린 경험은 '政治'보다는 '經濟爲主'의 政治·社會政策의 必要性을 強調하게 되고 결국 自由主義的 흐름에 바탕을 둔 市場機構가 그래도 次善이라는 느낌을 굳혀주고 있다.

EC諸國 經濟의 活路는 과연 어떻게 經濟的 調整, 보다 좁게는 産業調整 政策을 成功의으로 遂行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며 이는 또 尖端部門의 開發과도 직결된다. 需要側面, 그리고 主觀經濟的 視角에서의 政策이 난관에 부딪치자 이제는 (供給面에서의 革新을 통한 微視的 接近에 의하여 현재 當面한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努力을 경주하고 있다.

莫大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尖端産業部門에 있어서 EC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크게 뒤지고 있으며 競爭力의 弱化를 면치 못하는 根本的인 要因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한 예로 IC製造企業의 供給市場을 비교하면 (85年) 世界 15個 最大企業中 美國系가 8個, 그리고 日本系가 5個를 차지하는 反面 EC의 경우 2個에 지나지 않고 있다.

현재 會員國別로 新素材, 生命工學 및 電子産業 등 尖端部門의 개발을 위한 R & D投資를 급속히 擴大시켜 나가는 한편 産業構造의 再調整을 내용으로 하는 방어적, 공격적 産業政策을 展開하고 있다. EC테두리 내에서 共同政策을 보더라도 EUREKA (汎 유럽 共同技術 研究機構)計劃과 ESPRIT (유럽情報産業研究計劃)의 채택을 통하여 의욕적인 誘導政策을 遂行하고 있다.

1984年 2月 5個年計劃으로 출범한 ESPRIT는 마이크로·電子産業, 「소프트·웨어」기술, 事務自動化「시스템」및 「컴퓨터」製品 등 新情報産業 部門에 있어서 EC會員國內 民間産業 育成을 취지로 하고 있다. 한편, 85年 프랑스의 先導에 의하여 着手한 EUREKA計劃은 重要 尖端技術部門에 있어서 會員諸國 政府間 協力에 의하여 世界市場을 석권할 수 있는 기업의 出現을 시도하고 있다. 對象部門으로서 情報通信技術은 물론 「로보트」技術, 新素材開發, 生命工學, 해양탐사技術利用, 레이저技術 및 環境保全技術 등의 列을 들 수 있다.

EC會員國들이 이러한 部門들에서 오랜 期間 技術을 蓄積하여 온것은 사실이나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과연 어떻게 國家間 構造的 調整을 해결하느냐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 이들 部門의 大部分이 規模의 經濟效果가 크다는 點에서 市場確保라는 課題

도 추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끝으로 이상 보아온 問題點들에도 불구하고 視角에 따라서는 EC經濟가 다른 一部 先進國에 비하여 건실하고 또 높은 成長潛在力을 갖고 있다는 評價도 있음을 追記하고자 한다.

한 例로, DRI(1986.3)의 한 分析에 따르면 GNP에 대한 財政赤字의 比重에 있어서 EC제국이(1.6~3.4%) 美·日의 경우(5~5.7%)보다 健全한 狀態를 나타내며 年平均 勞動生産性의 추이에 있어서도(1960~83) 2.3~3.7%로서 日本에 比하여는(5.9%) 뒤지나 美國보다는(1.2%) 높은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또 交易條件, 價格競爭力 및 輸出 市場의 成長率등에 기초한 잠재적 GNP成長率을 비교하더라도 EC제국의 경우 美國과 日本의 中間에 위치하고 있다.